종 합 전주매일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누리과정 안정 재원조달책은?"

김명지 의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 없어 대책 마련을"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의 어린이들의 유아 학비 ·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 조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 은 제3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 해 "과거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재원조 달 정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강조

그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교육청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으로 조달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확 보의 어려움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회 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 정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무소속,

장수)이 1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전북형 경제정책 '제이비노믹

스(Jeollabukdo-economic) 가 필요하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제정책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할

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전북에 맞는 경제철학과 경제정책

을 수립하는 '경제적 지방자치' 가

며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며 재원 조 달 방안 마련 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어 리이지 누리과 정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

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미 그 갈등의 기미가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표면 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 의회에서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 침」 변경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분에서 지출하도록 했기 때 문이다.

현재 교육청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에서 지원하는 것에 어려운

"전북경제 성장 위한 '제이비노믹스' 가 필요해'

박용근 의원 "전북신용재단 통한 보증정책 통해 소상공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입장을 보여 '정부 전액국고 지원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 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년째 동결된 보육교 사 처우개선비 역시 시급히 해결해 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결국 어린 이집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확보 는 분명 국가 차원의 재원을 마련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 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참 여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

김명지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발 생하는 갈등의 피해는 결국 도내 아이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누 리과정 관련 갈등이 재발되지 않 도록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 발의

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의회 이정린의원(남 원1)이 문화예 술교육지원 조 례를 발의, 이 번 5월 회기인 363히 도이히 임시회에서 처



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시행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 회 설치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 터 지정과 역할의 명문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 속 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자치법규 입법 미 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이 정린의원의 조례안 발의도 문화예 술교육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초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정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 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그간 시행해오던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도 더 큰 동력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 인 관심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밝 혔다. /김진성 기자

>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도민 납세서비스 이용 편의 광주국세청 전북분소 설치를"

김기영 도의원 제안…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영(행정자치위 원회, 익산3)의 원이 전북도민의 납세서비스 개선 에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세

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 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위해 광주지방 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원거 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 경제 적 손해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납세협 력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호남권이

리는 이름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 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앞으 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 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조사국과 납 세자보호 업무 기능을 포함한 광주지 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설치할 것을 촉

건의안을 발의한 김기영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 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이 편리하고 질 높은 납세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도민고충처리위 운영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국 주영은 행정자 치위원장(더불 어민주당, 전주 9)이 제363회 임 시회에서 「전라 북도 도민고충 처리위원회 운 영 조례인」을 대

표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동안 각 지자 체에 민원실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민 들의 고충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를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

은 물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 뢰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는 전라북도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 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 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 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 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 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 원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위원회 구성은 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거 쳐 도지사가 위촉한 10명 이내로 구 /김진성 기자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하면서 "전북 경제 사령탑들이 전북경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한 고민을 통해 전라북도가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

에서 '최저 임

금 지역 차등

제 도입에 대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는 지역의 경제적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 박용근 의원 자체에 맡기자"고 주장한 바 있고, 은 또 최저임 금 인상으로 학계에서도 같은 의견이 조심스럽 전북경제의 어 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박용근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 인 려움이 가중되 고 있는 시점

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직 격탄을 맡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신용재단을 통한 '확장적 보증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 자영 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극적이 며 적시에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촉 구했다.

/김진성 기자

오평근 의원 "전기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우선해야"

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더불 어민주당)은 1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 도가 전기화재예방 시스템을 우선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도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도로변 전선의 불꽃이 화재원인으 로 언급되었다

오 의원은 "전기화재 대책에 있어 서만큼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불이 난 뒤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철저 한 화재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 도내 전기안전 분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



할 것"을 요구했다.

기화재 취약 시설에 대하 전수조사를 실 시하고, 필요시 소방청 등 정부 부처에 전기화 재 취약가구 안 전점검을 건의 해 대책을 마련

/김진성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심혀주는

-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